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재강·용혜인·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5
2. 총괄적 검토	9
3. 주요 조문별 검토	13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	13
나. 선감학원인권유린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7
다. 진상규명의 신청, 진상규명 조사개시, 진상규명 조사방법 등	23
라. 유해의 조사·발굴 등, 유전자검사, 손실보상	27
마. 동행명령, 청문회의 실시	31
바. 위원회의 활동기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34

사. 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	36
아. 피해자 명예회복, 위로금 및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38
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심의와 결정 등	42
차. 조세면제, 보상금등의 환수, 시효 등	45
카. 피해 치유 의무,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념사업 등	48
타. 보칙	51
파. 벌칙	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강·용혜인·이성권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소위 부랑아 일소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선감학원이 국가의 공권력 하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을 강제 감금하고, 이들에게 극심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과 고문의 고통을 겪게한 참혹한 사례임.

선감학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후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사과, 특별법 제정, 진실규명활동의 제도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임. 한편, 2024년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

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음.

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4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실지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동행 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

19조).

마. 위원회는 피해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조사 및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되,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고,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0조).

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선감학원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6조 및 제4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거행,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8조).

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4조).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총 7개 장 본칙 55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선감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강제 수용 및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던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둘째,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

셋째,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

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

넷째,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함.

다섯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로 인하여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 유족
	제2장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 소속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제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	소위원회	
	제9조	위원회 등의 회의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1조	진상규명의 신청	
	제12조	신청의 방식	
	제13조	신청의 각하결정	
	제14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15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16조	유해의 조사·발굴 등	
	제17조	유전자검사	
	제18조	동행명령	
	제19조	청문회의 실시	
	제2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최초로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한 날부터 2년
	제21조	진상규명결정	
	제22조	진상규명불능결정	
	제2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24조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제25조	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	
	제26조	손실보상	
	제27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28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29조	사무국의 존속기간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30조	피해자 명예회복	
	제3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32조	위로금 및 보상금	
	제33조	의료지원금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34조	생활지원금	
	제35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36조	심의와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금액 결정
	제37조	결정서 송달	
	제38조	재심의	
	제39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40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4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44조	시효	
	제5장	피해자 및 유족 치유 지원 등	
	제45조	피해 치유 의무	
	제46조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제47조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제48조	기념사업	
	제49조	불이익 처우 등 금지	
	제6장	보칙	
	제50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1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52조	비밀준수 의무 등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2. 총괄적 검토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 태평양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설치한 아동수용시설로, 1941년 10월 경기도 사회사업협회는 기부금 50만원으로 선감도 전체를 매수한 후, 1942년 조선감화령 등에 근거해 선감학원을 개원·운영하여 200명의 아동을 수용하였고, 이후 미군정이 1946년 2월 선감학원을 경성부의 상부기관인 경기도로 이관하였음.

1957년 2월 9일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설치 및 보호수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조례 제1조인 부랑아의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하여 선감학원을 둔다는 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감학원의 설립 주체임을 밝힌 바 있고, 1982년 9월 폐쇄 전까지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선감학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수용된 아동의 수는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및 2024년 두 차례의 진실규명을 통해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구금·노동, 폭력, 사망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고, 국가와 경기도에 대해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며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선감학원 사건(2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건) 개요>

□ 선감학원 사건 개요

- 일제강점기(1942~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전사(戰士) 확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선감학원 설치('42.5.)
 - 해방 이후, 경기도로 이관('46.2.)되어 폐쇄('82.7.)되기까지 부랑아를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폭력·학대 등 인권유린

<< 선감학원 사건 개요 >>

- (위치) 선감도(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
 - ※ 사건 당시 섬(선감도)이었으나, 간척종합개발사업(1987년)으로 연륙
- (수용인원) 4,691명(원아대장 자료) ~ 5,759명(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추정
- (운영 근거) 경기도 선감학원 운영 조례('57.2.9. 제정, '82.10.1. 폐지)
 - ※ (원장 및 직원) 경기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 (사건 내용) 일제강점기('42~'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전사(戰士) 확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선감학원 설치, 광복 이후, 경기도로 이관('46.2.)되어 폐쇄('82.7.)되기까지 부랑아를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폭력·학대 등 인권유린

□ 그간 주요 경과

-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자 236명 진실규명 신청('20.12.10~'22.12.9.)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22.10.18./167명) 및 권고사항 통보('22.11.28.)
-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기관 지정('23.2.23.)

(세부 권고사항별 소관 기관 현황 : 9건, ※ 행안부 관련 권고 5개)

- ① 국가사과 : 행안부, 복지부, 경기도, 경찰청
- ② 특별법 제정 등 피해회복 조치 : 행안부, 복지부, 경기도
- ③ 추가 진실규명 활동 제도화(추가 피해 신청) : 경기도, 행안부
- ④ 아동인권보호법제 정비 : 복지부, 법무부
- ⑤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 행안부, 복지부, 경기도
- ⑥ 조례이행 : 경기도 ⑦ 유해발굴 : 경기도, 행안부
- ⑧ 유적지 보호 : 경기도 ⑨ 역사기록 수정 : 경기도, 교육부

- 선감학원 피해자 간담회 개최('23.5.24., 지방행정정책관과거사지원단장 공동주재)
 - ※ 주요 요청사항 : 피해자 지원 및 신속한 유해발굴 요구 등
- 2차 진실규명('24.3.26./63명)
 - ※ 현재까지 인정한 230명 외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원아대장 기준 4,691명 추정)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선감학원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또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 23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할 것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해당 부처에 권고(2022. 11. 28.)한 것을 볼 때, 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선감학원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상당부분 진실규명이 이루어졌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일괄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 2024. 8. 12., 제2728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같이 개별 과거사 법률에 의한 보상 형식이 적절할지, 일괄보상법률 방식이 적절할지 보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보상금 지원 등의 경우 타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므로, 개별입법보다는 포괄적 차원의 입법논의가 바람직하고,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조사기간 연장법과 과거사 전반의 배·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추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선감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강제 수용 및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던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태평양 전쟁의 전사(戰士) 확보를 명분으로 선감학원을 설치한 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행, 학대 및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 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1946년에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에 폐쇄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행, 학대 및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2. “피해자”란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다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감학원사건의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이 법의 목적을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선감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강제 수용 및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던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

또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태평양 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선감학원을 설치한 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행, 학대 및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하거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1946년에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에 폐쇄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행, 학대 및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은 제명에서 관련 사건명을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과거사 및 민주화·인권침해 관련 법률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제명을 지명이나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볼 때,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사건명¹⁾도 이를 참고하여 인권유린사건 대신 인권침해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제명을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과거사 및 민주화 관련 법률>

구분	법률명
과거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1조(목적)에서 제정안은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도모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²⁾

1)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에서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으로 명명하였음.

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유린’ 및 ‘인권유린사건’이라는 표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명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 방법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및 ‘인권침해사건’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진상규명과 보상금등 지급 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간을 선감학원 설치 후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와 광복 이후 선감학원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관된 1946년부터 1982년까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의 발의배경이 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은 광복 이후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진상규명 등의 범위 역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와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을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안 제11조³⁾에서는 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및 유족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피해자와 유족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개별 과거사법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⁴⁾

3) 정의규정 및 제3조(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신청 및 진상조사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이 결정되는데, 제11조제1항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각 조항이 논리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다른 과거사법도 피해자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

나. 선감학원인권유린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
2.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피해자 및 유족 여부의 심의·결정
4. 제16조의 피해자 유해 조사·발굴
5. 제21조의 진상규명결정, 제22조의 진상규명불능결정
6. 제24조의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7. 제25조의 피해자 직권 결정
8. 제31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9. 제32조의 위로금 및 보상금, 제33조의 의료지원금, 제34조의 생활지원금 심의·결정 및 지급
10.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피해자 및 유족 단체가 추천한 사람

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진상규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진상규명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등의 회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3조·제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5조),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10조).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 입법례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⁵⁾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⁶⁾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⁷⁾ 등과 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제정안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감학원 사건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등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건이므로 피해대책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고려하여 정부위원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타 과거사 입법례 정부위원 현황>

구분	정부위원(당연직)
「4.3사건법」	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7)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여순사건법」	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전라남도지사
「노근리사건법」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충청북도지사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¹⁰⁾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의 위원 결격 사유에 유사 입법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임.

아울러, 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타 과거사 법률 대부분이 위원의 임기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 시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9)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¹¹⁾

사무국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유사 입법례의 경우도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국의 설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 : 유사 입법례(사무기구) >

「4.3사건법」(‘24.1.30. 개정)	「여순사건법」(‘25.1.7. 개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사건법」 시행령(‘24.7.30. 개정)	「여순사건법」 시행령(‘24.2.13. 개정)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1) 「과거사정리법」 2년, 「4.3사건법」 2년, 「여순사건법」 2년, 「노근리사건법」 3년

다. 진상규명의 신청, 진상규명 조사개시, 진상규명 조사방법 등

제11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방식) ① 제11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4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3조제1항의 각 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
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
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사실조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등에 주민등록 자
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통보·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7항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안 제11조),

위원회로 하여금 진상규명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진상규명의 신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바,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입법례¹²⁾를 참고하여 신청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개시보다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진상규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바, 이는 상당히 엄격한 경우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는 국가기밀 등 특정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¹³⁾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유해의 조사·발굴 등, 유전자검사, 손실보상

제16조(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유해 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무연분묘에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피해자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 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전자검사)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을 조사·발굴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6조),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

또한, 제정안은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

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발굴 과정에서 사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경우 그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¹⁴⁾ 「5·18민주화운동

1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5)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사 입법례

-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2항의 조사·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조사·발굴계획의 내용·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타인의 토지·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발굴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동행명령, 청문회의 실시

제1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및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9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18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5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증인·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

제정안은 위원회의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등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동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자료나 정보를 가진 자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일 경우 동행명령을 통하여 이들의 출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4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도 도입된 바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위원회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에 접근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¹⁶⁾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¹⁷⁾은 각각 청문회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바. 위원회의 활동기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2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활동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2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각하결정, 제14조의 조사개시결정, 제21조의 진상규명결정, 제22조의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1조의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20조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고(안 제20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1조).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상규명 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23조),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4조).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개별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은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입법례(위원회 보고서 작성기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

제25조(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제24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이나 진실화해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안 제27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8조),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9조).

안 제25조(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직권 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취지가 있다고 보임.

사무국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별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은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 3개월 간 사무기구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임.

< 참고 : 유사 입법례(사무기구 존속기간) >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2023.4.11. 개정)	「반민족규명법」 시행령 (2023.4.11. 개정)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2024.11.12. 개정)	「5.18진상규명법」 (2023.4.11. 개정)
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u>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u> 존속한다.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u>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u> 존속한다.	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u>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u> 존속한다.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u> 존속한다.

아. 피해자 명예회복, 위로금 및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제30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32조(위로금 및 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선감학원 수용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피해자의 일실탁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의료지원금) 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 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호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

간이자를 배야 한다.

③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본인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30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선감학원 수용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피해자의 일실이 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2조).

또한, 제정안은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33조),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4조).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각종 보상과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위로금 및 보상금과 관련하여 과거사 및 민주화 관련 법률은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함)」)이나 보상금(그 외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금은 일제의 강제동원 등에 대해 국가가 그에 따른 위로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선감학원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유사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을 참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을 위로금 대신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

또한, 보상금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재정부담 능력 및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¹⁸⁾

18)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미제출되었고, 행정안전부도 현 상황에서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은 현재 배상금의 적정규모를 쟁점으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15건이 진행 중으로, 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재판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과거사 보상금등 지원 관련 유사 개별입법례>

- ▶ 「4.3사건법」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 ▶ 「여순사건법」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 ▶ 「노근리사건법」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은 영동군 조례에 규정
- ▶ 「민주화보상법」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 ▶ 「부마항쟁보상법」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 ▶ 「강제동원조사법」 :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 ▶ 「5.18보상법」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심의와 결정 등

제35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제32조의 위로금 또는 보상금, 제33조의 의료지원금, 제34조의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재심의) ① 제3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37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정안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35조), 위원회로 하여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안 제36조),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7조).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8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안 제40조).

안 제36조(심의와 결정)부터 제3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까지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심의와 결정, 결정서 송달 등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안 제40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는 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에 동일 내용이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임.

<유사 입법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차. 조세면제, 보상금등의 환수, 시효 등

제41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의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4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正本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41조),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며(안 제42조),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43조).

또한, 제정안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4조).

안 제41조(조세면제)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상금은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¹⁹⁾에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및 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²⁰⁾에서는 해당 두

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②(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들을 아울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은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도 「5·18보상법」을 참고하여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

카. 피해 치유 의무,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념사업 등

제45조(피해 치유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 또는 추모행사의 거행
2. 아동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관 건립
3. 선감학원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4. 선감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불이익 처우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안 제45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7조), 국가 및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거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48조).

안 제45조(피해 치유 의무), 제46조(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및 제48조(기념사업)와 관련하여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이 국가와 경기도에 책임이 있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치유 의무,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²¹⁾

2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안 제47조(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²⁾

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22) 제정안에 따른 지원방안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거쳐 신빈곤층 등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 및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과 「트라우마센터치유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활용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보칙

제50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3조제2항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50조),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51조).

또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에 대해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2조).

안 제50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3조제2항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바,

피해자 등을 위한 기탁금품 접수 근거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주체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평화재단이 기탁금품의 접수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고,²³⁾ 「4·16세월초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및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기탁금품의 접수주체를 4·16재단 및 법률 제71조에 따른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⁴⁾

2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통보·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2. 제5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거짓으로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3.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으로 본다.

제정안은 위원회 소속 및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의 목적

으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고(안 제54조),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5조).

안 제54조(벌칙)의 업무상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형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그 외 유사 입법례²⁵⁾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안 제55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액도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동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25)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벌칙) ①~③ (생략)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벌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는데 비해, 유사 입법례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²⁶⁾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43

2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5. 제60조를 위반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